월/요/광/장

김규열

중국의 만리장성 늘리기

관동대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1924년 11월, 일본에서는 기상천외한 책 한권이 출판된다. 오타니베(小谷部)라는 목사가 쓴 책으로, 몽골제국을 건설한 징기즈칸이 실은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책이다.

전 세계를 정복한 불세출의 영웅 징기즈칸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오타니베의 주장에 일본사회는 열광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이 책은 일본 근대 출판사상 미증유의 판매부수를 기록하게 된다.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충 이렇다. 일본 무사정권의 태동기인 12세기말 미나모토 요시츠네(源義經)라는 출중한 무장이 있었는데, 일본사는 그를 혁혁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형과 대립한 끝에 결국은 억울한 최후를 맞는 비운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타니베는 요시츠네의 최후를 자결로 결론지은 정사의 기록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요시츠네는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홋카이도로 몸을 피했고, 훗날 몽골로 건너가 몽골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징기즈칸이라는 것이다.

오타니베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요시츠네가 죽음을 면해 홋카이도에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민간전설이 존재한다는 것, 징기스칸이 활약한 시기가 요시츠네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시기 이후라는 것, 그리고 징기스칸과 관련된 어휘들의 발음이 요시츠네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 등등을 제시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거의 '전설따라 삼천리' 수준의 황당한 이야기지만 당시 일본사회는 이 책에 열광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지만 달아 오른 대중들의 열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자에게는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격려와 감동의 편지가 쇄도 했다. 이에 더욱 신바람이 난 오타니베는 급기야 일본인의 기원은 유태인과 맥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책까지 내기에 이른다.

이러한 당시 일본사회의 광기의 배경에는 메이지(明治)정부 이래 집요하게 진행되어 온 왜곡된 민족주의 교육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칭화대의 모 교수가 중국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에 제안했다는 대중화주의 건설을 위한 역사 프로젝트, 이름하여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은 동북공정·서남공정·서북공정의 상위 개념이다.

이 역사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중화문명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를 제치고 1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 최고의 문명으로 부상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편협한 자국 중심적 사관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중국 국가문물국은 고고학 조사 결과 만리장성의 총길이가 2만1196.18㎞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만리장성 길이는 명나라 때를 기준으로 6352㎞가 정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보다도 3배가 훨씬 넘게 늘어났다.

그야말로 엿장수 엿가락 늘리기 수준이다. 이번에 늘어난 만리장성 유적지에 새롭게 포함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고구려와 발해가 위치했던 지역이다.

만리장성 늘리기는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해온 동북공정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의 자랑스런 유산이자 인류의 유산인 만리장성이 무리한 자국역사 확장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편협한 역사인식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더불어 G2 국가의 한 축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무가 크다.

민족주의가 과잉상태에 이르면, 배타와 폐쇄의 벽에 갖히고 만다는 것은 역사의 상식이다. 자신의 존재나 문화를 알리고 싶다면 상대방의 존재와 문화도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이나 국가나 대개 비슷하다. 자기만 최고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친구거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법관 들어설 때 일어서야하는 이유

박진현

법무관 시절 1년간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소속 변호사로서, 검찰에 들어와서는 검사로 수년간 공판에 나서고 있다.

그런 필자에게 지인들은 가끔 "판사님들이 법정에 들어올 때 왜 모두 기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필자는 거의 습관적으로 법관이 법정에 들어설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소개받을 때 예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지만, 형사재판을 청구한 검사가 법정에서 법관에게 능동적으로 예의를 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법관과 처음 마주칠 때 기립함으로써 예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필자 역시 자유로움을 즐기고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나, 사람에 대한 또는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나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격식과 예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탈권위주의는 무질서와 다르고, 자유는 방종과 구분되는데, 무질서와 방종을 피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한 것이다.

법정에서의 법관은 검사와 피고인 간, 원고와 피고 간의 상반된 주장을 경청하고 각종 증거를 조사하며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즉 법관의 역할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주재하며 그것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기립하는 이유는 법관이 우리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법관의 그러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좀 더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법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이나 방청객들이 법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떠들면서 복장이나 태도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면,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진지하면서도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권위 있는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법정에서의 법관이 들어설 때 일어서는 것, 즉 기립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법적인 의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 법관에 예의를 표함으로써 해당 재판에 임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진지함과 엄숙함을 더할 수 있고, 스스로 좀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관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방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또 사회를 반영해가며 변해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립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법관이 내린 결정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

기 고

미래형 수익모델 '에너지농장사업'

손영호

최근 국·내외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FTA로 인해 농산물 시장개방은 확대되고 농업인구는 노령화가 심화돼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농촌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에 이어 지난 5월 2일 협상이 개시된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생산 구조의 유사성과 가격 경쟁력 격차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6.1% 감소하였음에도, 우리 전남은 무려 10.1%가 증가하여 정부에서 도별 농가 평균소득을 발표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소득을 상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전남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올 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농장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농업용 시설인 축사·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농업 외 소득사업이다.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연리 1%의 저금리로 농어가에 시설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30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월 75만원 이상의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미래형 소득사업이다. 올해 첫 시행사업임에도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 애초 계획한 50개소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법과 제도가 보완된다면 사업 확대가 가능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사나 창고 등 농업용 시설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해당 시설의 냉난방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가 소비가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할 때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농지의 용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농업시설물의 생산적인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은 사업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농업용시설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농장사업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농장사업이 농수산물 개방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 입찰' 방식도 에너지농장사업처럼 소규모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농어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4개항을 건의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안으로도 상정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미래형 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에너지농장 사업자와 같은 소규모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농어업인이 신청한 전력을 우선 매입해 줄 것과, 매전단가를 kw당 200원 이상 책정되도록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생산전력 판매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입찰제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농지법에 대해서도 농업진흥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축사·창고 등 농업용 시설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관계법령을 개정 요청하였다.

전남도의 이러한 건의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미래형 영농사업인 에너지 농장사업이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남도의 미래를 보는 창의적 농정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개방화시대에 농업·농촌·농업인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조화 섞어파는 화환…비양심 영업행위 단속해야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빼곡하게 놓인 화환들을 많이 본다. 그런데 이 꽃이 모두 다 방금 화원에서 따 온 싱싱한 생화일까, 그리고 처음 행사장에 나타나는 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화가 반이 넘고 식이 끝나면 리본만 갈아 끼워서 되파는 재탕 행태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그 실상이 기막히다.

당장 결혼식장에 가보자. 결혼식 혼주나 결혼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 주듯 길게 늘어선 축하 화환들을 많이 본다. 언뜻 보면 모두 생화 같다.

최근 친척 결혼식장에 축하객으로 갔다가 식장 복도에 놓여져 있는 화환의 꽃 한 송이를 만져보니 뻣뻣한 질감이 느껴졌다. 단박에 조화라는걸 알 수 있었다.

물론 전부 다 조화는 아니다. 꽃의 주변은 생화로 장식을 하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조화를 꽂아 넣은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꽃을 보낸 사람이나 화환을 받아든 혼주는 새까맣게 속는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멀리서 혹은 결혼식장 주변에서 꽃을 주문할 때 주소와 예식장 이름만 적어주면 꽃집에서 알아서 꽃배달을 한다. 이때 멀리서 전화로 주문하고 온라인 계좌 입금한 주문자가 그 꽃에 조화가 섞여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혼주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정신없는 예식장에서 꽃에 조화가 섞였는지 만져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예 작심하고 조화를 가려내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거기에 조화가 꽂혀져 있는지, 전부 다 생화인지 아무도 모르게 지나치는 것이다.

설사 조화가 섞인걸 발견해도 꽃집 측에서 "원래 조화가 섞이게 돼있다"고 말하면서 완전 생화로 하면 이보다 더 비싸진다고 할 게 뻔하다.

이 싸구려 중국산 저질 조화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다른 집에 갔던 화환을 다시 가져다가 리본만 바꿔서 끼워 되파는 행태. 이러다 보니 국내 화훼농가가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비신사적인 영업 행위를 좀더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 설

민주 이해찬號 국민 신뢰 회복 나서야

민주통합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 9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더욱 본격화할 야권 내 대선 주자들의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경선 효과를 최대화해 본선 승리를 견인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한길 후보와의 갈등을 치유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서 파생돼 현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북(從北)론과 색깔론 시비도 넘어야 할 과제다.

이 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이념 공세에 대해 '신매카시즘 광풍'이라며 정면 대결 방침을 선언한 바 있어 색깔론 공방이 일단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색깔론 시비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향후 대선 정국의 불투명성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념 논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켜왔던 중도 진보(개혁)의 가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도 겸허히 새겨야 한다. 매카시즘은 안되지만 맹목적 종북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중도 진보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당면 과제와 함께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대선에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 세계적 경제 위기와 국내 경제 침체 등으로 불안하고 고단한 민생을 챙겨야 한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여야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이해찬 호(號)는 경제 위기 해소책 마련과 함께 미래지향적 발전 정책을 선점하는 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사장 검증 조례 수용이 옳다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 검증을 위한 조례가 광주시의회와 행정안전부 간 법정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광주시가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에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행안부가 최근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 공청회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광주시를 통해 요구한 재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지난 7일 임시회에서 "행안부의 지시에 따른 집행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 검증 공청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도 행안부와 광주시가 무리하게 재의를 요구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면 행안부는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 침해,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점 등이 공기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할 경우 행안부가 법원에 제소할 것이 확실시돼 법적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우리는 현재 일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 검증' 과정 잡음을 지켜보면서 시의회의 재의 거부가 옳다는 판단이다. 광주시가 광주환경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등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측근 인사 심기로 빈축을 샀던 사례만 보더라도 인사 검증이 절실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행안부와 광주시는 공기업 인사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사 검증 공청회 조례를 수용해야 한다.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항을 수정해서라도 시행하는 게 옳다. 그래야만 자치정신도 살리고 지방공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無等鼓

도시농업

독일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던 19세기 중반 도시로 몰려든 가난한 노동자에게 유휴지에서 채소를 길러먹을 수 있도록 텃밭이 딸린 작은 농장(Kleingarten)을 보급했다. 이 공공형 농장은 초기에 부족한 식량의 공급처 역할을 했지만, 삶의 질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여가·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만개가 있으며, 국민 중 20명 중 1명이 이를 이용한다.

영국에서도 18세기 후반 시작된 알로트먼트 가든(Allotment Garden)이 최근 웰빙 먹을거리 공급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런던 시민의 14%는 자신이 먹을 작물을 직접 재배한다.

일본이 1960년대부터 조성한 시민농원은 3000여개소에 이른다. 뉴욕에는 옥상에 텃밭을 둔 빌딩이 600개 이상이고, 캐나다 몬트리올에도 8000곳이 넘는 텃밭이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도시내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고 있다. 건물의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등 재배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현재 전 세계의 도시농부는 8억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안전하고 값싼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데다 자연 체험 및 생명체와 교감을 통한 정서순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 등 다양한 효과 덕분이다. 시멘트 위주의 삭막한 도시를 건강한 녹색생태계로 변모시키며 '내 손으로 기른 상추를 따서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하는 삼겹살 파티'의 즐거움은 덤이다.

광주에서도 도시농업이 확산일로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현재 31곳의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은 6700여명에 달하며, 파악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큰 전업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걱정거리다. 자투리땅을 이용하되, 상업성은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